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405>

JCCT 2024-7-45

대한민국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ransitioning to All-Volunteer Force in South Korea

선승배*, 박상혁**

Seung-Bae Seon*, Sang-Hyuk Park**

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기반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해왔지만,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군사 기술 발전 등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모병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모병제는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성별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병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병제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방비 절감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제언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모병제, 징병제, 병역제도, 군사 전문성, 사회적 형평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sustainability of South Korea's conscription system, which is being questioned due to issues like low birth rates and societal changes, and to explore the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ransitioning to an all-volunteer force (AVF). South Korea has long maintained national security through conscription, but it now faces challenges such as a decrease in military resources and the advancement of high-tech military technolog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study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AVF and assesses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South Korea's military service system. The findings indicate that an AVF can enhance military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respect individual choice, and contribute to reducing gender imbalance and promoting social equity. A phased road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VF is proposed, along with the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measures to foster public consensus.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potential positive economic impacts and long-term cost savings of the AVF.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concrete strateg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adopting a Korean-style AVF, thereby proactively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national defense posture.

Key words : All-Volunteer Force, Conscription, Military Service System, Military Professionalism, Social Equity

*정회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동원지원 교수 (제1저자)

**정회원,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5월 15일, 수정완료일: 2024년 6월 1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4일

Received: May 15, 2024 / Revised: June 1, 2024

Accepted: June 14, 2024

**Corresponding Author: plbas@hanmail.net

Dept. of Dronebot Military, Jungwon Univ, Korea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징병제를 기반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행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2]. 이에 따라 모병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병역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4][5].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인구 구조 변화, 국방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한국형 모병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모병제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모병제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국내외 학술 논문, 정부 보고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모병제 관련 이론과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현행 징병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2][3]. 연구 범위는 한국군 지상군을 중심으로 하되, 해군과 공군의 사례도 필요에 따라 포함하였다. 또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병제 전환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해 2030년대 이후의 인구 구조 변화와 안보 환경 전망을 고려하였다[1][2].

II. 이론적 배경

1. 병역제도의 유형과 특징

병역제도는 크게 징병제와 모병제로 나눌 수 있다.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4]. 반면,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만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이다[1].

징병제의 장점으로는 병력 모집과 유지 비용이 적고, 일정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쉬우며, 양적인 군사력 강화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4]. 또한 징병을 통해 국민 전체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 의사가 제한되고, 병력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인재 활용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1][2].

모병제의 경우 개인의 자유 의사가 존중되고, 지원 동기가 높은 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숙련병 양성과 군의 전문성 제고에 유리하다[3]. 또한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다. 반면, 필요한 병력 규모 충원이 쉽지 않고,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특정 계층에 병역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4][5].

이처럼 징병제와 모병제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3]. 어떤 병역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는 해당 국가가 처한 안보 환경, 경제 수준, 인구 구조, 역사적 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이지만[3], 한국의 경우 분단 상황 속에서 상비군 유지의 필요성, 병력 자원 확보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징병제의 유지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국의 모병제 사례 분석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의 모병제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모병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1973년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당시 전쟁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병역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모병제 도입이 추진되었다[1][3]. 이후 미국은 지원자의 자발적 입대를 기반으로 한 모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군은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의 군 복무 기피 경향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3].

영국 역시 1960년 이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왕실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게 장교로서의 의무복무 제도가 적용된다. 영국군은 자발적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이들에게는 교육 기회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영국 역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징병제 부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2].

이처럼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모병제의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군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안보 위협 증대 시 필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특정 계층에 병역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노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기타국의 모병제 사례 분석

뉴질랜드는 1972년 노만 커크 노동당 정부에 의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2]. 뉴질랜드군은 현재 완전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력 규모는 약 9,000여 명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제1,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공을 받은 영향으로 오랫동안 징병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1992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2]. 현재 네덜란드 국방군은 4만여 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정권 시절 징병제를 시행했으나, 독재 종식과 냉전 해체 이후 200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2]. 스페인은 현재 NATO 회원국으로서 약 12만 명의 모병군을 운영 중이다. 이탈리아는 냉전 시기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2004년 모병제로 전환했다[2]. 현재 이탈리아군은 약 18만 명 수준의 병력을 모병으로 충원하고 있다. 모로코는 프랑스 식민 지배와 1970~80년대 서사하라 분쟁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현역 입영 자원이 너무 많아 1980년대부터 사실상 모병제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다가 2007년 공식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했다[2].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냉전 종식, 군사 위협 감소, 병력 운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모병제를 도입했다. 다만 최근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2]. 한국의 경우 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안보 상황과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대한민국 병역제도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병역법을 통해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의무병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행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 병력 충원 및 운영 실태, 병역 형평성 및 사회적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대두되면서 현행 징병제 유지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1. 병력 충원 실태와 문제점
 Table 1. Recruitment Status and Problem

구분	내용
병력 충원 실태	-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심화 - 2025년부터 50만 명 병력 유지 어려움
병역 형평성 문제	- 여성 병역의무 면제로 인한 성 불평등 논란 - 대체복무 확대에 따른 병역 형평성 훼손
사회적 비용	- 경제활동 인구 감소 및 인재 활용 비효율 - 개인의 자유 침해 및 인권 문제 제기
징병제 한계	-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부적합 - 병력 질적 수준 제고의 어려움

현행 징병제는 저출산 추세로 인해 병력 충원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와 대체복무 확대는 병역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4].

또한 장기간의 의무복무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활용의 비효율, 개인의 자유 침해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3]. 아울러 첨단화되는 군사 환경에서 단기 의무복무 병사 위주의 군 구조는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

이처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징병제도도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병역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IV.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

1. 군 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차원

대한민국 군은 현재 병력 위주의 재래식 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전 양상 변화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5]. 특히 무인·로봇 전투체계, 사이버전, 우주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련도 높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2].

현행 징병제 하에서는 단기 복무 위주의 병력 구조로 인해 첨단 무기체계 운용이 제한되고, 전투력 발화에 한계가 있다[5].

따라서 국방개혁 차원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복무 정예병력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군 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방부 역시 2006년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서 병력 위주의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정보·기술 중심의 군 구조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4].

이처럼 모병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병역제도의 변화를 넘어,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정예 과학기술군 육성을 위한 군 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발맞춰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병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3].

2 사회적 형평성 제고

현행 징병제는 병역의무 불균형과 개인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 차별적 요소가 있으며,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과 무관하게 군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4][5].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 또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부제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4].

이에 따라 모병제 도입을 통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모병제 하에서는 군 복무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병역의무의 성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2].

표 2. 병역의무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구분	징병제	모병제
병역의무	남성에게만 부과	남녀 모두 자원 입대
개인 선택권	제한적	자발적 선택
인권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병역거부권 인정

다만 모병제가 사회적 형평성을 완벽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입대할 가능성이 있어,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모병제로의 전환과 함께 사회 안정망 확충, 대체복무제 도입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제적 효율성 증대

모병제로의 전환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행 징병제는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상당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18개월 내외의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층의 학업이나 취업이 지연되고, 이는 개인의 생애소득 감소로 이어진다[5].

또한 모병제는 산업인력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3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이들 청년층을 산업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1]. 특히 이공계 전공자, 숙련 기술 인력 등 국가 기간산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3].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모병제 전환에 따른 국방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생산가능인구 확대와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2]. 또한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강군 육성을 통해 국방비 절감도 기대해 볼 수 있다[1]. 따라서 모병제가 가져올 경제적 효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충분히 도입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V. 한국형 모병제 전환 방안

1. 단계적 모병제 도입 로드맵 제안

한국의 안보 상황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모병제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군의 안정적 병력 충원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선 모병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초기에는 특수전부대, 기술집약부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모병 인력을 충원하고, 이후 모병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다[3][1]. 이 과정에서 모병 대상과 인센티브 설계도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수 있을 것이다.

표 3. 단계적 모병제 도입 로드맵 제안
 Table 3. Phased Roadmap for the Proposal of Voluntary Military Service

단계	기간	내용
1단계	2025~2030년	- 특수전, 기술집약 분야 모병제 우선 시행 - 모병 비율 10% 내외로 시작
2단계	2030~2035년	- 일반 전투병과로 모병제 확대 - 모병 비율 30% 수준으로 확대
3단계	2035년 이후	- 육군 중심 全軍으로 모병제 확대 - 모병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모병 대상은 초기에는 전문대 이상 학력자, 기술자격 보유자 등으로 한정하되, 점차 고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3]. 또한 여군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장교·부사관 인력을 모병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1].

아울러 모병 장려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의무복무 대비 2배 이상의 급여 지급, 복무 중 학비 지원, 전역 후 취업 연계, 군인 가족 복지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3][1].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소 차원에서 모병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모병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병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병주의에 기초한 징병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4]. 따라서 모병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병역법 역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현역병 징집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모병 대상과 절차, 복무 기간,

급여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3]. 특히 장기복무 장려를 위한 계급 정년 연장, 진급 기회 확대 등 인사 관리 제도의 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무청의 기능과 조직도 모병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징병 검사와 입영 관리 업무는 축소·폐지하는 대신 모병 홍보와 선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1]. 장병 복지 지원과 전역 후 취업 연계 등 새로운 역할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

표 4. 주요 정비 사항
 Title 4. Major Maintenance Items

구분	주요 정비 사항
병역법	징집 규정 삭제, 모병 관련 사항 신설
병무청	모병 선발·관리 기능 강화

모병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방예산 확보도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병제 전환 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되, 병력운영비 위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 봉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숙소 현대화, 복지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7].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GDP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방비 증액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비효율적인 방위력개선비 사업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지출 효율화에 주력해야 한다[2]. 나아가 국방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모병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병역의무 이행 방식의 근본적 변화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도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모병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 개편 필요성, 개인의 선택권 보장 등 모병제 전환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3][1].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국민 공청회, 토론회, 캠페인 등 다각도의 소통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병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빈민 모병제' 논란, 입대 기피 현상 심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2]. 이를 위해 병 복무 여건 개선, 전역 후 취업 지원, 군인 가족 복지 혜택 등 가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 알려야 한다.

표 5.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Table 5. Measures to Enhance Social Acceptance

구분	주요 내용
홍보 활동	- 모병제 전환 당위성 설명 - 대국민 공청회, 토론회, 캠페인 등 소통 강화
인식 개선	- 병 복무 여건 개선, 취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빈민 모병제' 등 우려 사항 선제적 해명

정부는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병역제도 개편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

물론 이 과정에서 모병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견해 차이가 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 국방 수요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논의 속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모병제 도입 로드맵을 설계해 나간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성공적인 제도 전환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사회 구조적 변화, 국방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모병제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문헌 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청년층의 군 복무 기피 경향 등 징병제의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어 병역제도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4][2].

둘째, 모병제는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4][5].

셋째, 다만 안보 위협 증대 시 안정적 병력 확보가 어렵고, 특정 계층에 병역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5][2].

넷째, 이에 한국형 모병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3][3][2].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개혁 차원에서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과 첨단 무기체계 운용에 적합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3][1].

둘째, 병역 형평성 제고와 개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여군 확대, 대체복무제 도입 등 병행 조치가 필요하다 [4][5].

셋째, 모병제 전환에 수반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병력 운영비 중심으로 배분해야 한다[3][3].

넷째, 모병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병 복무 여건 개선 등 인식 전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5][2].

다섯째, 모병제 도입이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2].

이제 대한민국도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모병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병역제도 개편이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건설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KEIA, "South Korean Conscription and the Challenges of a Declining Population.", <https://keia.org/the-peninsula/south-korean-conscription-and-the-challenges-of-a-declining-population/>.
[2] The Korea Times. "S. Korea's Low Birth Rate

- Poses Challenges to Military Conscription." The Korea Times,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5/113_364602.html.
- [3] U.S. Department of Defense. "All-Volunteer Force Proves Successful for U.S. Military." Defense.gov, <https://www.defense.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3316678/all-volunteer-force-proves-successful-for-us-military/>
- [4]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Military Service Act -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KLRI,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lang=ENG&hseq=25744
- [5] Bae, J., & Lee, Y. J. (2024). How Mandatory Military Service Can Divide Rather Than Unite: Conscription, Gender, and Military Trust in South Korea 2003 - 2021. *Armed Forces & Society*, 0(0). <https://doi.org/10.1177/0095327X241234021>